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01 주요내용

- 정부는 5.13일(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최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¹⁾」를 개최함
 -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 재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함
- 복지재정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 제도를 추진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 가산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복지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의 인상 등 개선방안 마련
 - 부동산 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의 확대(25% → 35%)
 - 복지재정 효율화, 규제완화 등 국정 협력이 필요한 시책수요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다음으로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복지사업은 정비·조정 등 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비하기로 함
- 또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예타시 민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민자로 우선 추진할 계획임

2015 국가재정 전략회의 개최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추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자체 정비 및 민간투자 규제 개선

02 경기도의 시사점

- 노인 등 복지대상자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복지수요 가산반영비율 상향조정으로 교부받을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행정자치부가 타 시도와의 균형을 위한 보정율을 적용할 우려도 상존
- 복지정책을 선도해온 경기도의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작·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중앙정부의 정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 기류에 맞춰 민간투자 방식의 복지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성공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민간투자방식의 복지사업 발굴 확대 및 모델 제시

1)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16년 예산안과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됨(9월)

2.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국가적 아젠다 수립

01 추진배경

-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재정의 건전성 위기나 재정압박의 우려를 상시적으로 제기하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은 사회복지비 지출에 있음
- 이에 국무조정실장 주재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세부 실천계획이 확정됨(‘15.5.8)

재정 건전성 위기 해결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확정

02 주요내용

- 주요내용은 4대 중점분야, 35개 실천과제로 구분되며 관련 과제는 다음과 같음

4대 중점분야	복지분야 해당과제	주요 실천과제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5개	민간 영역과 정보 연계, 지자체 확인조사 주기 단축 및 급여반영 현황 모니터링
부적정수급 근절	3개	복지분야 부적정수급 적발 및 실적 점검, 복지로 신고 활성화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3개	지자체 복지사업 실태조사 및 조정,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 이행력 강화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4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개선, 의료급여 해당자 관리 강화

4개 중점분야의 중 복지분야 해당과제는 15개

- 이외에도 위 과제들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하기 위한 14개 실천과제를 별도로 마련함
- 한편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시행 ‘13.1.27) 이후, 세 번째 중점분야에 해당하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집중관리를 위한 관련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지자체는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여부 검증 의무화 단계를 거쳐 사업을 신설·변경하도록 명문화함
 - 전 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13.10.31~11.13) 실시
 - 제 5차 사회보장위원회(‘13.12) 개최 :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관리 방안 논의
 -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기준」 배포(‘14.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DB 구축 개시(‘14.4)

03 현재 경기도의 대응

- 도와 사군에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단 구성을 완료함(‘15.4)
 - 도 : 단장(행정·부지사), 부단장(보건복지국장), 총괄반, 제도개선 발굴반, 평가반, 민간기관
 - 사군 : 단장(부단체장), 총괄반, 제도개선 발굴반, 부적정 수급대책반, 민간기관
- 그 외 사군 부단체장 회의(‘15.5), 사군 실무회의(‘15.5) 등 도 차원의 준비 중

추진단 구성을 통한 도 차원의 준비

02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지역특색반영 복지사업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복지사업,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음

경기도	성남시, 최대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 추진 : 성남시의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돕고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
울산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교육비 지원(유사 사업 : 충북교육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한부모 가정 자녀 1,800여 명 교육비 지원, 경기도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교복비와 학자금 지원)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운전면허 취득비 40만 원씩 지원, 자녀 능력 개발비 7만~13만원 학원비 10개월 지원, 수학여행경비 5만~15만원 지원
충북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3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랑 신부나 부모가 지역 내 예식장과 장례식장을 이용 하면 100만원 지원
충남	노인복지조례 '행복경로당' 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실시. 행복경로당은 도내 거점 경로당 175곳 지정, 노래방 시설이나 학습시설 등을 갖추고 노인복지관 기능을 수행하도록하고 무료 경로식당도 운영.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한곳에 모여 살도록 하고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지원
전남	목욕탕이 없는 읍면에 119곳의 '목욕장' 을 설치 운영, 이용료는 무료이거나 1,000원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경북	상주시, '100원 희망택시' 운영. 성주군, 오지 주민이 예약 시 500원이면 마을에서 면 소재를 오갈 수 있도록 '별고을택시' 운영(유사사업 : 전북 정읍과 충남 서산과 청양, 경기 포천과 여주, 전남 영광·강진·영암·곡성, 충북 보은, 광주 광산구, 경남 밀양과 하동 등에서 100원 택시, 100원 복지택시, 마을택시, 행복택시 등의 이름으로 운행 중이거나 운행을 추진, 충남 아산 '마중버스' 운영)

전국 지자체들의 특색있는 복지 사업과 시책

2. 의회 동향

주요내용

與 신상진 의원, 새누리 무상급식·무상보육 TF위원장 임명

새누리당은 19일 무상급식·무상보육 TF 위원장에 지난 4·29 재보선에서 당선된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을 선임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 보건의료분야 연구인력 충원 제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19일 본회의 2차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경기도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강화 및 보건복지연계를 위해 경기복지재단 내에 관련 연구인력을 충원토록 제안

3.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일시 : 5. 21.(목) 12:00~16:00 (※개회식 13:00~)
제16회 작품전시 및 예능 발표회	•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03 FACT CHECK

1.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얼마나 증대하나?

- 2015년 7월 1일자로 대표적인 공공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경. 중요 변화는 ①급여별 기준선 적용 ② 중위소득기준 활용
- 중위소득 4인가족 422만원으로 발표(2015.4.25)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로 확대
- 생계급여(28%)는 현행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수준)보다 낮으나 타급여 지급기준이 높아 대상자는 최소 1.3배~2배 증대 예상
 - 현행수급자 : 119,755가구(가구의 2.5%), 189,400명 지원(인구의 1.6%)
 - 예상수급자 : 151,248~153,265가구(가구의 3.2~3.3%), 246,757~378,121명 지원(인구 2.0~3.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경

예상수급자는 246,757~378,1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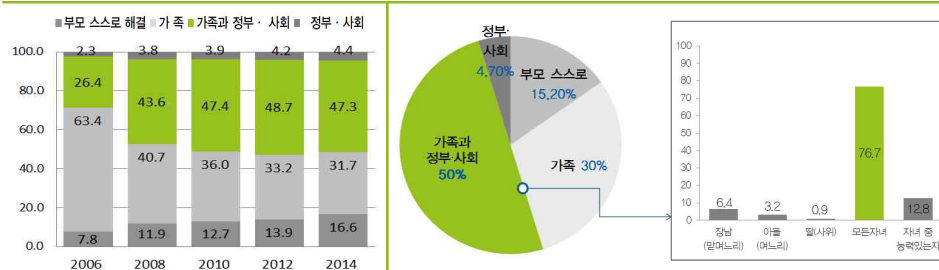
합계	예상 수급 가구수		예상수급 가구원수	
	경기도육구 조사자료(가구수, %)	한국복지 패널자료(가구수, %)	경기도육구 조사자료(명, %)	한국복지 패널자료(명, %)
전체	151,248 (3.2)	153,265 (3.3)	378,121 (3.1)	246,757 (2.0)
생계급여	95,754 (2.0)	87,580 (1.9)	205,872 (1.7)	136,625 (1.1)
의료급여	26,115 (0.6)	36,492 (0.8)	60,064 (0.5)	63,131 (0.5)
주거급여	6,529 (0.1)	11,677 (0.2)	15,342 (0.1)	21,019 (0.2)
교육급여	22,850 (0.5)	17,516 (0.4)	57,126 (0.5)	26,449 (0.2)
현행	119,755	(2.5)	189,400	(1.6)

04 통계로 보는 복지

1. 부양의식의 변화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2014년 경기도 부모 부양 의식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부모의 노후 생계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크게 증가하였음
-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